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1. 11. 19.(금) 08:00
담당과장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장 김귀범 (044-215-2830)	담당자	하다애 사무관 daae0517@korea.kr 이재현 사무관 jaeheon7@korea.kr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장 김승태 (044-215-2770)		김애리 사무관 arkim0814@korea.kr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장 이보인 (044-960-6160)		신대원 서기관 recallme@korea.kr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디지털뉴딜팀장 김우철 (044-960-6170)		박상우 사무관 jerrypark@korea.kr

제목 :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19(금)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 ❶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사항 점검(산업부, 제목만 공개)
- ❷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현황(행안부, 제목만 공개)
- ❸ 첨단 교통체계 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국토부, 제목만 공개)
- ❹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금융분야	(금융위)	해운분야	(해수부)
소상공인·중기분야	(중기부)	환경분야	(환경부)
관광분야	(문체부)	디지털분야	(과기부)
외식분야	(농식품부)	행정분야	(행안부)
수출입분야	(산업부)	공정거래분야	(공정위)
고용분야	(고용부)	통계분야	(통계청)
교통분야	(국토부)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개최배경 】

제39차 정책점검회의¹⁾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지난 3분기 소득·분배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전반적으로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폭이 커

분배 상황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3분기에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시장소득의 증가입니다.

시장소득의 양대축인 근로소득(+6.2%)과 사업소득(+3.7%)이

전년동기대비로 두 분기 연속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방역위기 이전인 '19.3분기에 비해서도

상당폭 높은 수준(근로 +5.9%, 사업 +3.8%)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소득의 62.5%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큰 폭 증가가
3분기 소득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저소득계층인 1분위에서

근로소득(+22.6%)과 사업소득(+20.7%) 모두 20% 이상 증가하며

전체가구 평균 소득 상승률(+8.0%)을

매우 큰 폭으로 상회하였습니다.

시장소득,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소득 증가가 두드러진 가운데

방역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소득 보완은 3분기에도 지속되었습니다.

1)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EITC 등 그간의 꾸준한 기초 사회안전망 강화 토대 위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정책대응의 효과가 더해지면서
공적이전소득도 +30.4% 증가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계에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된 '소비플러스' 자금 등으로
공적이전소득의 총소득 개선 기여도 역시
저소득층(1분위 10.7%p, 5분위 1.7%p)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시장소득의 큰 폭 증가와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보완이 병행되면서
전체가구의 총소득은 +8.0%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9년 개편전 가계동향조사를 포함하여
'06년 통계조사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전체 총소득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1분위 증가율(+21.5%)이 5분위 증가율(+5.7%)을 크게 상회하면서
대표 분배지표인 5분위배율(5.34) 역시 큰 폭으로 하락($\Delta 0.58$ 배p)하여,
통계조사 개편('19) 이후 3분기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방역위기 발생 이전인 '19년과 비교한 5분위배율도
4분기 연속 개선세²⁾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3분기 소득·분배지표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장소득의 전조한 증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정감하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는 포용적 회복의 취지를 담아
①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②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현황,
③첨단 교통체계 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5분위배율 증감('19년대비, 배p): ('20.4/4) $\Delta 0.05$ ('21.1/4) $\Delta 0.44$ (2/4) $\Delta 0.15$ (3/4) $\Delta 0.42$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사항 점검】

첫 번째 안건은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사항 점검입니다.

지난 11.12일부터

물가안정 및 국민과 기업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유류세 20% 인하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일주일인 지난 11.18일 기준 전국평균가격이
휘발유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11.11일 대비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하여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된 모습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전 1,800원대였던 휘발유가격이
10.13일 이후 한달 여 만에 처음으로
1,6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기준으로 인하 금액대별로 봤을 때
유류세 인하액의 164원 이상을 인하한 주유소가 1,567개소,
인하액의 90%(148원)이상 인하한 경우는
전체 주유소의 약 1/4 가량인 2,796개소에 이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평균 가격 인하폭은 유류세 인하분의 83%를 넘어섰으며,
전체 주유소의 약 80%인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폭도
유류세 인하분의 60%를 넘어서는 등
가격인하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휘발유가격은
2주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11.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93.1불로
2주전에 비해 약 6불 정도 하락³⁾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휘발유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급격히 높아진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유가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등 일일점검체제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현황 】

두 번째 안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7.1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2차 추정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9.6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신청 편의 증진을 위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총 1,421만건 발송하고
온라인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등에
‘찾아가는 신청’을 33,432회 운영하는 등
적극적 지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국제휘발유가격(\$/B): (11.2일)101.2 (3)98.6 (5)94.6 (8)96.8 (11)95.1 (15)92.9 (17)93.1

그 결과 국민지원금 DB상 지급대상인 4,326만명 중 98.7%에 해당하는 4,272만명에게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금액기준으로도 현재까지 2차 추정에 반영된 예산액 11조원 중 98%에 달하는 10.8조원이 既지급되었습니다.

아울러 지급된 국민지원금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총전액 7.7조원 중 85.5%에 해당하는 6.6조원이 10.24일 기준으로 이미 사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원금 지급시기의 관련 체감경기 지표를 살펴보면, 소상공인 BSI⁵⁾는 지급개시 직전 달인 8월 34.8에서 지급이 시작된 9월 57.6으로 상승하였으며, 전통시장 BSI⁶⁾는 같은 기간 32.6에서 77.4까지 상승하여 국민지원금 지급이 체감경기 회복에 일정부분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도 차질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제(11.18일)까지 신속보상 대상 61.5만개사 중 86.7%에 해당하는 53.3만개사가 지급신청을 하여, 이 중 52.5만개사에 총 1.5조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4) 9.6일~10.24일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분석

5) 소상공인 BSI: (7월) 32.8 → (8월) 34.8 → (9월) 57.6 → (10월) 62.5

6) 전통시장 BSI: (7월) 26.6 → (8월) 32.6 → (9월) 77.4 → (10월) 57.9

아울러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더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서도
개별업종의 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확정·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첨단 교통체계 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세 번째 안건은 첨단 교통체계 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정부는 교통정보의 실시간 수집·제공·활용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수단·시설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을 포함하여 약 18,000Km(포장도로
총연장의 약 18% 수준)에 ITS 도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국도 및 지방도 약 4,000Km를 추가 확대하고,
'24년까지 국도 전 구간, '25년까지 주요 지방도에
ITS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에 대비하여
기존 ITS에서 한 단계 발전한 단계로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차량 간의 양방향 정보 교신이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23년까지 주요 고속도로(2,400km)에 C-ITS를 시범구축하고,
'24년부터는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며,
C-ITS 통신 간 보안 확보를 위해
인증된 차량과 인프라만 통신을 허용하는 인증관리체계 구축 등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新서비스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는 등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가 공고하게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코로나와 공존하는 이전과 다른 일상에서도
정부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 상황 관리와 정책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4/4분기 경기흐름은 금년 연간 성장을 뿐 아니라
동시에 내년의 출발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0월 소비자심리지수⁷⁾가 큰 폭으로 개선된 가운데
11월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반등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전인 '19년과 비교시
11월 2주까지(1~14일) 전체 카드 매출액⁸⁾이 15.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음식점 카드 매출액은 0.7% 증가하면서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위기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회복 흐름이 보다 강해질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없도록
리스크 요인도 보다 주의깊게 살피겠습니다.

7) 소비자심리지수(p): ('21.4)102.2 (5)105.2 (6)110.3 (7)103.2 (8)102.5 (9)103.8 (10)106.8(+3p)

8) 전체 카드 매출액('19년동기비, %): ('21.7)10.7 (8)7.6 (9)15.8 (10)15.7 (11.1~14) 15.3
음식점 카드 매출액('19년동기비, %): ('21.7)△18.1 (8)△25.6 (9)△11.6 (10)△8.0 (11.1~14) 0.7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합니다.

과장된 우려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됩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